한발 물러선 문체부… 고발→수사의뢰, 대상 시장→유치위 관계자

세계수영선수권 공문서 위조 수사 과정 관심

문서 '가필'이냐 '위조'냐 규명이 핵심 강운태 시장 수사 이뤄질지에 촉각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일어난 '정부 보증서 위조 사건'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검찰에 유치위원회 관계자를 수사 의뢰하면서 향후 검찰수사가 어떤 결론을 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체부와 광주시는 기존 문서가 새롭게 작성됐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수준에 대해서는 '가필'대 '위조'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광주시는 그 당사자와 원인 역시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문체부는 '실수'든 '고의'든 상관없이 중대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가 검찰에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하고 대상 역시 '시장'이 아닌 '유치위 관계자'로 해 강경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애초 관계자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기문란의 중대한 문제라는 관점에는 변화가 없으나 법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하는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운태 광주시장을) 특정 지어 수사의뢰하기보다는 유치위원회 업무과정에서의 감독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수사의뢰 당사자를 유치위 관계자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단 검찰은 문체부로부터 22일 오후 늦게 수사의뢰를 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일반적인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의 사건을 맡는 형사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뢰는 혐의가 의심된다는 것으로 아직 단정지을 수 없으며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우선 문서가 변경된 경위와 그 배경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사실상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 그에 따라 처벌 규모와 수위가 가려지게 된다.

문체부가 수사의뢰 대상으로 한 '유치위원회 관계자'에 포함되는 유치위원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전체 직원 조회에서 "지난 4월29일 총리실에 발각된 후 김윤석(대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았다"며 사전 연관성을 부인했다.

문서 위조 행위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할 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공문서 위조는 대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위 공문서 작성은 권한 있는 사람이 각각 그 내용을 위조했을 때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공문서 위조죄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선거범죄가 아닌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지위가 박탈되는 만큼 공직자의 경우 공문서 위조만은 피하려할 공산이 높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 1, 2심 재판은 모두 광주지법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문서 위조 사건은 단독재판부에서 다루고 있어 1심은 광주지법 형사단독에서, 항소심은 형사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법원 측은 예상했다. 특히 검찰 수사 후 1~2심 재판 기간이 내년 지방선거 기간에 맞물릴 공산이 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22일 종로구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에서 열린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및 정부 보증서 조작 관련' 입장 발표에서 보증서 관련 문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강운태 광주시장이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 보증서 조작 논란과 관련 22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불미스러운 일 발생에 깊이 사과 정총리, 바뀐것 알고도 예산 약속"

강운태 시장 기자회견

강운태 광주시장은 22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 위조(가필)와 관련해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다만 중간과 최종본에 (위조되지 않은)원본을 제출했고,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개최지 투표 당일 문제를 제기한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브리핑 및 직원 조회를 통해 "지난 4월 29일 총리실서 공문서 위조를 지적받은 사실에 대해 김윤석 (대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공문서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서 "4월 2일까지 (국제수영연맹에) 유치신청서 초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정부보증서 내용이 바뀐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당시 이러한 내용을 보고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을 호통을 치고 정부 보증서대로 다시 바꾸라고 지시한 뒤 총리실과 장관에게 사과했다"면서 "정홍원 국무총리도 정부 보증서가 바뀐 사실을 알고도, 지난 5월 1일 FINA 실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수영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총리가 지원의사를 재차 밝힌만큼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당시 위조한 실무자가 해당 보증서 제출과정에서 누구에게까지 보고 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실무자로부터 김윤석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문체부가 이날 유치위원회 관계자를 수사 의뢰한 데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면서 "다만 유치 당일 (공문서 위조와 고발사실)이 왜 언론에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수사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인천시, 대통령 동영상 조작하고도 정부지원 받았다

'예산철회' 약속위반 논란

정부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 지원 약속을 철회하면서 '약속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동영상을 조작·도용해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성공한 인천시의 사례가 새삼 회자되고 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지난해 발간한 자서전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07년 4월 17일 쿠웨이트에서 열릴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국 투표를 겸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게 된 것이다.

당시 유치 희망국들은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부분에 대통령의 육성으로 '정부가 대회를 적극 지지한다'는 말을 넣는 게 관례였다. 인천시는 동영상 마지막 부분을 남겨놓고 청와대로부터 관련 동영상이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결국 유치단이 출국할 때까지 동영상은 오지 않았다.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올인하던 노 대통령은 인천의 아시안게임 유치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 시장은 자서전에서 당시 궁여지책으로 꾀를 냈다고 밝히고 있다. 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평창이 유치되면 정부와 국민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입수, '평창이'를 빼고, 나머지 대목을 프레젠테이션 동영상의 마지막에 끼워넣은 것이다.

당시 유치단에 동행했던 문화부 직원이 이를 보고해 청와대로부터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유치총회에서 관련 동영상을 상영해 유치에 성공했다.

안 전 시장은 자서전에서 "동영상 제작은 내가 지시했다"면서 "당시 인천은 축제분위기였다. 하지만 유치단과 동행했던 김명곤 문화부 장관이 노 대통령의 진노를 사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전격 경질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대회 유치 이후 총 2조 5000억원에 달하는 대회개최 비용 중 30%가 국비로 지원중이며, 국비지원비율을 7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